



CEO 출신 농업전문가 윤명희

발로 뛰는 윤명희 !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

TEL (02)784-4630 / FAX (02)788-0281 / E-mail : m567h@na.go.kr

[2015. 9. 21(월)]

윤명희 국회의원,

전라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

- 1. 전북 귀농·귀촌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,
역귀농 세대도 매년 늘어 역귀농 비율 8.9% 달해**
 - 역귀농 실태조사 결과 귀농·귀촌 정책에 반영 되어야
- 2. 전북,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
온난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재배 적극적 지원 필요**
 -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는 늘어나는데,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부족
- 3. 농가소득이 10년 째 정체 중인 전라북도 3모작 활성화에 앞장서야**
 - 3모작을 활성화 할 경우 벼 단작보다 농가소득 30%이상 증가
- 4. 전라북도 축산업, FTA 체결로 인해 매년 1,038억원의 피해 발생
축산농가 보호대책 마련 시급**

**전북 귀농·귀촌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,
역귀농 세대도 매년 늘어 역귀농 비율 8.9% 달해**
- 역귀농 실태조사 결과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 되어

-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, 비례대표)은 2012년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전북은 2012년 6월 기준 귀농귀촌 세대가 전국 2위임에도 불구하고, 귀농농가소득은 일반농가소득의 57%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역귀농 조사와 귀농귀촌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인력 배치 문제 지적한바 있음.
- 2010년~2012년 사이에 귀농·귀촌한 4,086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.9%인 365세대가 역귀농한 것으로 조사됨.

< 귀농 통계 >

구분	계	2010년	2011년	2012년
귀농귀촌 세대	4,086	611	1,247	2,228
역귀농 세대	365	53	137	175
비율	8.9%	8.7%	11%	7.9%

* 2013년 조사결과 (3년 주기로 시행. 2013년 ~ 2015년 조사는 2016년 1월 실시 예정)

- 역귀농 사유별로는 부족한 소득이 가장 높았고, 영농기반 부족, 일자리 부족, 자녀교육, 주거지 마련 순으로 나타남.

<역귀농 사유>

사유	부족한 소득	영농기반 부족	일자리 부족	자녀교육	주거지 마련	기타
비율(%)	17.3%	11.2%	9.6%	8.8%	4.9%	48.2%

- 전라북도는 귀농·귀촌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인력이 1명 뿐 이어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지원센터운영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4명을 보강하여 현재 총 5명 (전주 3, 서울 2) 근무 중임.
- 이에 윤명희의원은 “전북의 귀농·귀촌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, 역귀농 세대도 매년 늘고 있는데 역귀농 실태조사를 그저 조사에만 그치지 말고, 귀농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함”을 지적하고, “귀농귀촌 활성화 취지에 알맞게 귀농귀촌 센터는 모든 것을ONE-STOP 서비스로 제공할 것”을 당부함.

**전북,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
온난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재배 적극적 지원 필요**
-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는 늘어나는데,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부족

○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, 비례대표)은 2012년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전북은 아열대작물 판로 및 홍보를 위한 지원(예산집행)이 이루어진 적 없음을 지적한바 있음.

○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.5℃ 상승하였으며, 이에 따라 새로운 작목발굴이 시급함.

* 세계 : 1900년 13.7℃ → 2000년 14.4℃ (0.74℃↑), 21C 말 3.7℃↑
* 한국 : 1900년 12.2℃ → 2000년 13.7℃ (1.50℃↑), 21C 말 5.7℃↑

○ 최근 5년간 전북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치보다도 낮는데,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연관된 농업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.

<농가소득>

(단위: 천원)
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전국	32,121	30,148	31,031	34,524	34,950
전북	31,105	29,639	26,226	30,869	33,616

○ 아열대성 작물은 기온이 상승할수록 재배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, 전라북도 또한 2012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.

* 전북 아열대성 작물 재배현황 : 2012년 70농가, 24.3ha → 2015년 153농가, 35.5ha

○ 하지만 최근 4년간(2012년~2015년) 아열대작물 관련 사업은 총 8과제, 예산은 636,000천원에 불과함.

<전북 아열대작물 관련 사업수행 현황>

(단위: 천원)

구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연구과제수	8과제	3과제 (신규 3)	5과제 (신규 3, 계속 2)	4과제 (신규 1, 계속 3)	5과제 (신규 1, 계속 4)
연구비	636,000	97,000	163,000	171,000	205,000

○ 이에 윤명희의원은 “도 차원에서 나서서 아열대작물에 대해 홍보를 하면 전북 농산물 홍보도 되고,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만 매진함으로써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음”을 강조하고, “아열대작물의 재배를 권장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”을 당부함.

3모작을 활성화 할 경우 벼 단작보다 전북 농업소득 30%이상 증가

- 농가소득이 10년 째 정체 중인 전라북도 3모작 활성화에 앞장서야 함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3모작을 활성화 할 경우 벼 단작보다 전라북도 농업소득이 30% 이상 확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3모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문함.
- 전라북도 농가소득은 실제 10년째 3천만원 초반 대에서 10년 째 정체되어 있는데 3모작을 활성화 할 경우 도 농가의 소득향상이 기대 됨.

<전국 농업소득 및 전북 농업소득 비교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전 국	32,121	30,148	31,031	34,524	34,950
전 북	31,105	29,639	26,226	30,869	33,616

- 실제,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한 결과 전북농가에서 벼 1모작을 할 경우 10a 당 소득이 651천원이지만 3모작을 할 경우 소득이 10a 당 849천원으로 30%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.
 - 또한, 2014년 곡물자급률은 24%인 상황에서 3모작을 활성화 할 경우 조사료 재배에 따른 식량자급률도 향상되어 농업경쟁력 강화를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됨.
- * 2014년 곡물자급률(%) : 전체 24%, 쌀 95.7, 밀 1.1, 콩 35.9, 옥수수 4.2 등
- 끝으로, 윤명희의원은 3모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배유형에 적합한 지역별 최적 작부체계 모형 개발 및 기술보급 강화가 필요하고 작목별 적정 재배 매뉴얼 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보급 주무부처인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.

전라북도 축산업, FTA 체결로 인해 매년 1,038억원의 피해 발생

- 전북, 축산선진국과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 필요!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전라북도에서 축산강대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매년 1,03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주문함.
- 한·미, 한·EU, 한·영 연방, 한·중 등 국가간 FTA 체결 및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농가 피해액이 연 평균 7,914억원(전국 기준)으로 매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.
- 전라북도의 경우 농림업 생산액의 35%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피해가 큰 상황임.
- 이에, 전라북도에서는 실질적인 축산농가 소득향상과 국가간 FTA 대응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, 돼지 등 품목별(축종별)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을 축산농가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 함.
- 이에 윤명희의원은 “농업선진국과의 동시다발 FTA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북도와 전북현장 농가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, 정책자금 금리 1%대 인하 등은 반드시 관철하겠다.”고 약속 함